

위화감 조성... 통일성 저해 vs 보급품 못믿어, 사제 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軍 사제장비 허용 논란

현실성 떨어지는 '국방규격' 신뢰 저하, 사제장비 갈망 키워 "미군의 표면적 제원 의존 끊고 엄정한 기준 세워야 국방력 ↑"

최근 군의 '사제장비' 허용 방침에 대해 "군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군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사제장비의 허용의 핵심은 장병들이 자신의 장비를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국방규격'의 부재지, 통일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수품은 민수품과 달리 전쟁터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장비여야 하기 때문에 '국방규격'이란 엄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피복 및 개인전투 장구류, 소총 및 광학장비는 엄정한 '국방규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전사 출신의 한 예비역은 15일 "사제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는 군인들이 많다. 나의 임무에 맞는 장비가 어떤 성능을 가져야 할지, 혹은 해외 특수부대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유명 메이커의 장비를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해지는 국군의 국방규격은 현실성이 떨어져 일선 장병들로부터 보급품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현실성 있고 전장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국방규격이

계속 부재한다면, 사제장비에 대한 장병들의 갈망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사교육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군에 납품을 하는 군납업체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술한 국방규격의 피해자일 수 있다. 군 당국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규격으로 인해 '방산비리'의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성 없는 국방규격은 사용자와 판매자 그리고 군 당국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면서 "일부 업체의 주장과 미군 장비의 표면적 제원에만 의존하는 국방규격을 풀어내야만, 건전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이 양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례로 흥 편집장은 "군이 사용하는 조

준경 PVS-11K는 6년 전에 도입된 장비지만, 요구사양은 약 10년 전에 작성됐고, 요구사양의 기준은 거의 20년 전 수준"이라며 "더욱이 광학장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한채, 군 자체 정비를 요구하는 사양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광학장비는 정밀성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명주기 등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면 업체를 통해 정밀정비를 하거나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업체의뢰나 폐기 후 교체가 일반적이다.

장비에 대한 이해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군납 및 방산장비는 국군이라는 우물 속 개구리로 멈춰버릴 것이다. 1980년대 까지 피복 및 장구류 시장은 한국제품이 세계적으로 통용됐지만, 이제는 중국과 대만에게 자리를 잃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eoul.co.kr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충남 계룡시에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에 전시된 위러퍼 플랫폼 장비. 일각에서는 신형 소총의 접안점이 낮아 광학장비의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관 매도 코스피 2140선 마감

15일 코스피지수가 다시 2150선을 내렸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2161.85)보다 16.73포인트(0.77%) 내린 2145.12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31.4원)보다 2.9원 오른 1134.3원으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뉴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르면 11월말 착공

고위급회담서 공동보도문 합의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복구기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로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北 모든 핵무기·핵물질 폐기가 비핵화”

文 대통령 프랑스서 비핵화 강조

“체제보장시 비핵화 조치 이행 美,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해야” 김정은 비핵화 의지 거듭 언급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놓고 “궁극의 목표는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세 차례 김 위원장을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5가지를 예로 들었다.

▲북한이 4월 채택한 '새로운 전략노선'에서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 ▲25년 핵 협상사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 ▲풍계리 핵실험장, 장거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추가 폐기 의사 및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가 조치 의향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직접 천명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현실적 이유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은)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이 직접 협의해 합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선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중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 제재 완화 등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권 개선이 긴밀한 남북 협력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이 채택된 나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파리 대통령궁에서 있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는 물론 교육과 투자, 교육과 문화 등을 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질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환경, 인권, 테러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의 울림' 콘서트를 관람한 뒤 무대에 올라 방탄소년단 등 출연자들과 함께 관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